

경북 찾은 이재명 “수해 복구·경제 회복 위해 추경 필요”

민주당 지도부 안동서 현장 최고위... 폭우·산사태 피해 점검 “재난 상황 무정부 상태...尹 보조금 투입 발언, 재난지원과 무관”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경북을 찾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 위원회의’를 열어 경북 지역 폭우와 산사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안동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

고위에서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피해방지에 국가적 역할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의 특별재난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의, 기존 수준의 방재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수마가 합치고 지나간 자리의 상처가 너무나 깊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며 “국가 재난 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 귀국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4명의 사상자를 낸 정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은 문책론을 거론하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대통령 심기만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오송 사고 지역에 가서 ‘이러니 대통령이 화가 나시죠’라며 심기 옹호를 하고 있다”며 “이게 여당 대표가 할 이야기인가.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박수한 번 쳐달라 말을 두 번이나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와중에 골프를 치고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때를 쓰고 있고,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을 나서서 방어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아붙였다.

민주당은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 및 피해 보전 재정에 투입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

도 거듭 문제 삼았다.

정 최고위원은 “국가 예산은 대통령 호주머니에 있는 찜뭉돈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수재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복구를 한다는 말인가”고 쏘아붙였다.

박 최고위원도 “돈급없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도 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갖다가 쓰라는 것인데 지금이 조선시대냐. ‘저기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애한테 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며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고 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사장 선거 선관위 위탁

이형석 의원 개정안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19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를 통과했고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의무위탁 대상’과 ‘임의위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임의위탁 대상이었다. 이로 인



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및 이사장 선거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에 근거한 선관위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불법적인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이어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원외모임 “의원 50% 이상 교체 ‘공천혁신’ 필요”

국회서 회견... 10대 혁신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9일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촉구,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더혁신회의가 친명(친 이재명) 성향이라는 점에서 비명(비 이재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가 필요하며 3선 이상 다선은 4분의 3 이상 물갈이돼야 한다”며 10대 혁신안을 혁신위에 제안했다.

이들은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내년 총선 후보자 경선에서 득표율의 50%를 감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역 의원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공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시 ‘당 정체성’ 항목 신설, 경선 후보자에 대한 합동 토론회 보장, 3선 이상이 경선 시 결선투표 의무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경선 모바일 투표 도입을 통한 당원 참여 기회 보장, 경선 후보자의 정계 경력 등 정보 공개도 촉구했다.

더혁신회의의 공천혁신안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공천을 변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맞물려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에서 공천물을 다룰 것인가’라는 물음에 “후배이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공천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그 무엇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안 다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물이 본격 논의되면 계파·지역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 공천물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혁신위가 새로운 물을 만든다면 당내 분열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공천 TF단장이었던 이기호 의원은 최근 “공천물은 중앙위원 72% 찬성으로 확정됐다”며 “당원의 의사를 초월하는 권력은 없다.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역구 3선 제한 등은 위한 소지가 있는데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개 등도 기존 시스템 공천 물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체성 항목도 계량화 및 평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결선투표 의무화, 경선 모바일 투표 도입, 합동 토론회 보장 등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론 혁신은 당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예상수입액 30%로”

강은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9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서 30%로 늘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18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가 약 20만 명씩 증가했고, 22년에는 24만 9000명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급속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며 “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10.9%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노인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대상자의 증가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



하기 때문에 보험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제도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액은 매년 10~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2년 기준으로는 13.9%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의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될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양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